

칼럼

송근섭

ACAMS 한국대표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 회장



자금세탁방지에 초강수 두는 美 금융당국



TD뱅크에 사상 최대 1조 7500억원 벌금 부과 미국 시장 진출 국내 은행 철저한 대응 요구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TD은행(미국법인 TD Bank, N.A. 및 TD Bank USA, N.A.)에 대해 은행비밀법(BSA) 위반 혐의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7,500억 원(약 1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BSA는 불법 자금으로부터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자금세탁방지(AML) 법률이다.

TD은행은 미국 내 주요 은행 중 하나로, 이번 벌금은 미국 재무부 및 FinCEN이 금융기관에 부과한 사상 최대 금액이다.

FinCEN은 이번 조치와 함께 TD은행에 대해 4년 동안 독립적인 감시 체제를 도입해 개선 조치를 감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월리 아데예모(Wally Adeyemo) 재무부 부장관은 "대다수의 금융기

관이 미국 금융 시스템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FinCEN과 협력하고 있지만, TD은행은 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TD은행의 만성적인 실패는 펜타닐과 같은 마약 밀매부터 테러 자금 조달, 인신매매 등 다양한 불법 활동이 금융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라며, "이번 역사적인 조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 자금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라고 밝혔다.

FinCEN 국장 안드레아 가키(Andrea Gacki) 역시 "TD은행은 10년 이상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방치해, 불법 행위자들은 물론 TD은행 직원들까지 이를 악용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TD은행의 방치로

인한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것이며, 금융기관이 범죄로부터 금융 시스템을 보호할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TD은행은 BSA와 FinCEN 규정을 준수하는 최소한의 AML 프로그램을 유지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했다. FinCEN 조사에 따르면, TD은행은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한 주요 리스크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았고, 이에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투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TD은행은 인신매매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동료 간 거래(Venmo, Zelle 등) 처리에 실패해 이러한 거래를 제재 보고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된다.

TD은행의 내부 통제 문제도 드

러났다. 2021

년, 한 TD은행 직원이 마약 자금 세탁에 가담하며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 직원은 셸퍼(Shell) 컴퍼니 명의의 다수의 계좌를 개설해, 고위험 국가에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TD은행은 이러한 활동

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TD은행은 수조 원에 달하는 거래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수천 건의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의심거래보고서(SAR)를 작성하지 못했고, 일부 고액현금거래보고(CTR)는 지연되거나 법 집행기관을 오도하는 정보로 제출되었다.

이번 합의에 따라, TD은행은 과거 거래 데이터를 재검토하고

누락된 의심거래(SAR) 보고서를 보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FinCEN은 TD은행의 전반적인 AML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독립적인 감시 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국 법무부, 통화감독청(OCC),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같은 감독당국들도 추가적인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의 TD뱅크에 대한 제재 발표 당일에 TD뱅크의 주가는 5.3% 5.3% 폭락했다.

전세사기 지옥, 기울어진 운동장 갇힌 청년들



기자수첩

장호성
건설부동산부

얼마 전 13년 지기 친한 지인 한 분이 결혼을 하신 뒤 전셋집을 알아보다가 전세사기에 말려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항상 전세사기 관련 기사를 쓰고, 전세사기 피해자나 피해단체도 직접 만나서 취재도 많이 했지만 실제 주위 사람이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은 상당히 충격적으로 느껴졌다.

그런가 하면 작년에는 또 다른 친한 지인이 월세방을 떠나면서 보증금을 빼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집을 더럽게 썼다고 억지를 부리며 보증금 500만 원 돌려주기를 거부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뭔가 부수먹었거나 벽에 못이라도 박았으면 모를까, 설령 그렇다고 해도 보증금 500만 원을 못 돌려주겠다는 건 너무 심하지 않은가. 다행히 이 지인은 치열한 법리다툼 끝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부동산 기자로 나름 오래 출입하다 보니, 주변 지인들이 집을 구할 타이밍이 되면 종종 상담을 해오는 경우가 있다. 현대 그런 사례들을 직접 보고 듣다 보면 인간에 대한 애정 자체가 식어버릴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나와 비슷한 나이의 지인들이 부동산과 관련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부분은 '정보를 얻을 방법이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요새 아무리 주거와 관련된 상담센터나 어플리케이션이 잘 돼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관련 네트워크가 충실히 갖춰진 기성 부동산 세력에 대응하기에 개인의 힘은 너무나도 미약하다. 태생부터가 기울어진 운동장인 셈이다.

지난해부터 전국 청년들을 눈물 짓게 하고 있는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만 해

도 그렇다.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사자성어가 있듯, 공인중개업자나 악성 임대인들이 작정하고 사기를 치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걸려들 수밖에 없다. 심지어 그 대상이 사회생활 경험조차 얼마 없는 20대 초중반의 청년들이라면 더 설명할 것도 없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 4명 중 3명이 30대 이하 청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97.4%는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였다는 점을 봐도 전세사기의 대다수는 자금여력이 충분치 않은 주거 소외계층을 상대로 벌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다수 부동산 정책은 주로 다주택자·건설회사 등 '가진 자'의 입장만을 좀 더 보호할 뿐, 약자에 대한 배려는 형식적으로 대중 끼워넣는 방식으로 행해졌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아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부동산은 꾸준히 우상향하며 '부동산불패'라는 이론을 만들어냈고,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사이 격차와 불신을 점점 키워왔다.

혹자는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 속 당연한 현상이라고도 말한다. 하지만 제도를 한 번 움켜쥔 세력이 이를 영위하며 세습까지 한다면 그 독점이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 최소한 출발지점에도 서지 못한 청년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 아닌가.

올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6명대까지 쪼그라들었다. 새는 먹잇감과 동지가 없으면 결코 알을 낳지 않는다. 하물며 동지를 찾는 새들을 붙잡아 깃털과 날개를 뽑고 하늘을 날아갈 원동력조차 잃어버리게 한다면 어떨까. 기울어진 부동산으로 쌓아올려진 이 나라의 미래는 이미 난관지세에 이르렀다. 슬프게도 결과에 대한 책임은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몫일 것이다.

보험과 사람, 그 이상의 가치를 담다

Higher Insurance value,
Greater customer Impressions

IGAA 보험GA협회

한국보험대리점협회